

보도 일시	2022. 10. 6.(목) 17:30	배포 일시	2022. 10. 6.(목) 10:00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천영평 (044-200-2092)
		담당자	사무관 송지영 (044-200-2095)
담당 부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기획총괄과	책임자	과 장 조아리 (02-2076-5310)
		담당자	사무관 오소면 (02-2076-5312)

## 여순사건위원회, 첫 희생자 45명 결정

▶ 제3차 여순사건위원회 개최, 첫 희생자 45명 결정,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 등 위원회 출범 후 실질적 첫 조치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 ▶ 희생자 45명(전원 사망자)
  - ▶ 유족 214명(배우자 1, 직계존비속 190, 형제자매 19, 4촌이내 방계혈족 4)
-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
  - ▶ 향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 실시,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직권조사 실시」 결정
  - ▶ 문헌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피해신고 접수가 저조한 전북 남원 지역 피해현황 직권조사 실시('22.11월~'23.1월)

□ 정부는 10월 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가 출범('22.1.21.)한 이후 첫 희생자 결정으로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4년만의 일이다.

○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이며 유족(214명)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 여순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조사도 시작된다.

○ 오늘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향후 2년간('22.10~'24.10) 진상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 위원회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국가기록원 등 여순사건 관련 자료 1,200여건을 수집하는 등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온 바 있다.

□ 아울러, 전북 남원지역의 피해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 남원 지역은 문헌상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저조하여 실질적인 피해현황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 한편, 위원회는 출범('22.1.21.) 후 9개월 동안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신고처를 설치해 9월말 현재까지 3,200여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 여순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방송신문, KTX 전광판, 농협ATM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하고, 상담부터 접수까지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했다.

○ 또한,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창작오페라 공연 등 다양한 교육·문화사업도 지원해왔다.

□ 위원회는 내년부터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 (의료지원금) 향후 치료비+간호비(월56만2천원)+보조장구 구입비

▷ (생활지원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 대상 중위소득(3인가구)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 기준('22년 기준, 월 약56만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

○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확대 및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순사건 추념식(10.19)을 며칠 앞두고 실질적인 첫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또한,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편,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2023년 1월 20일 까지이며, 신고서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우편접수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 문의처 : 실무위원회(061-286-7881~3) / 위원회(02-2076-5300)

- 붙임: 1. 여순사건위원회 개요  
2. 여순사건 신고 안내  
3. 여순사건위원회 홍보용 이미지

\* 여순사건이란 정부수립 초기 단계에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법 제2조)





□ 여순사건위원회 위원 명단 (15명)

직 위	성 명	사 진	약 력
위원장	한덕수		· 국무총리
부위원장	이상민		· 행정안전부장관
위원 (당연직)	한동훈		· 법무부장관
	이종섭		· 국방부장관
	이완규		· 법제처장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
위원 (위촉직)	이규종		· 現 구레유족회장 · 前 교사, 교감, 교장
	서장수		· 現 여수유족회장 · 前 송원대학교 전기공학 교수
	윤현주		· 現 윤현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前 대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김남규		· 現 종합법률사무소 이정 대표변호사 · 前 노원구청, 인천광역시청 고문변호사
	홍영기		· 現 순천대학교 명예교수 · 前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장준갑		· 現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 前 제주4·3사건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일		· 現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 前 진화위 조사국장, 기록정보관 등
	주철희		· 現 함께하는남도학 소장 · 前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센터 연구원
	정호기		· 現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초빙교수 · 前 민주화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

1. 신고기간 : 2022. 1. 21. ~ 2023. 1. 20.

## 2.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 가. 진상규명 신고

○ 신고자격 : ① 희생자 ② 유족 ③ 희생자 친족 ④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 신고장소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전국 시도, 사군구, 재외공관

### 나. 희생자·유족 신고

○ 신고자격 :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

-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 신고장소

- (도내 거주자)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사군 여순사건담당, 읍면동 민원실

- (도외, 국외 거주자)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여순사건지원단)

## 3.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여순사건위원회 홈페이지(<https://yeosun1019.go.kr>(서식다운로드))

▶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http://www.jeonnam.go.kr)) > 부서자료실 > 여순사건지원단

## 4. 우편 접수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5. 문의처

○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061-286-7881~3)

○ 여수·순천 10·19사건 지원단(02-2076-5300)

**붙임 3**

**여순사건위원회 홍보용 이미지**



- 진실규명으로 희망의 꽃을 피우다
- 민간인, 군인, 경찰을 상징화

